



광복절 73주년·정부수립 70주년 만세삼창 15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철도 공동체·통일특구 남북 경협 청사진 제시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된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한전 공대·에너지 벨리 “광주·전남 현안 사업 적극 지원 하겠다”

민주 당권주자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 공약

호남에 대한 진정성 강조 ... 지역 현안 비전 제시

오는 25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기호 순) 등 당권 주자들은 15일 일제히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 발전 공약'을 제시해 달라는 광주일보의 주문에 대해 당권주자들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각자의 해법을 내놓았다. 일단 모든 당권주자들은 '광주형 일자리'와 '한전 공대', '에너지 벨리' 등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광주·전남의 미래를 넘어 시대의 과제'라며 당·정·정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은 100% 반영하

겠다고 강조했다며, 이해찬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를 대한민국 일자리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현안사업과 관련, 송영길 후보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권을 아우르는 전남 서남권에 '해양에너지 복합 발전 플랜트 사업'의 조기 착공은 물론 한전 공대 설립 등을 통해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후보는 충청권의 카이스트, 영남권의 포항공대에 이어 호남의 한전 공대를 성공적으로 설립, 나주 에너지 벨리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여기에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목포, 영암, 해남 지역에 대해 추경 조기 집행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후보

는 전남을 일자리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전 공대를 세계적 대학으로 키우는 것은 물론 나주의 에너지 벨리와 광주의 자동차산업을 결합시켜 전남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한전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과 문화관광사업,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를 성공시켜 전남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밖의 공약으로 송영길 후보는 광주군 공항 이전 부지에 스마트 시티 조성하고 함께 한반도 신경제구상인 'H 라인'의 시발점인 목포를 환황해경제벨트, 남방 경제를 아우르는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후보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국립심혈관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지원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의료산업을 집적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철

저하게 밝히는 한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약속했다. 이해찬 후보는 차기 총선에서 광주·전남에서 전략공천은 절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기 사람을 심지 않고 정책과 전문성, 지역 평가를 기준으로 상향식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 민심의 불편한 심정을 겨냥하는 한편,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비엔날레 '일몰제' 제외 국비 지원 계속 받을 수 있다

2020년 30억 이상 지원 예상

올해 행사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국비 지원이 축소됐던 광주비엔날레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몰제는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 중 7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국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다.
15일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제행사의 유지·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국제행사 지원 사업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편성되는 지역특별회계인 경우 심사적용 범위에서 제외, 일몰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부산비엔날레, 제주공예비엔날레, 제주문화엑스포 등 4개 행사가 일몰제 대상에서 빠졌다.
1995년 첫해 행사(준비년도 포함 2년 예산) 예산 117억원 중 40억원을

지원받았던 광주비엔날레는 이후 대회 87억원-100억원의 예산 가운데 20억~40억원을 꾸준히 지원받았다. 2014년과 2016년의 경우 준비년도에 10억원, 개최년도에 20억원 등 예산 100여억원 중 30억을 지원받았지만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2017년과 18년에 각각 9억씩만 지원받는 데 그쳤다. 비엔날레는 이번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20년부터 다시 3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돼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비엔날레 일몰제 적용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국회의원과 광주시·시의회, 비엔날레재단, 지역 예술계 등은 일몰제 재검토와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매년 열리는 행사의 경우 7회, 2년 주기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 지원을 뒤 일몰제를 적용하되 연장 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일몰을 연장해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angju.co.kr



대한민국 완도
해양치유산업 최적지

완도군은 해양치유 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100년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동북아 해양치유산업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생일 금곡 해수욕장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